



지상파 MMS, 드디어 ‘꿈틀’ 1월 2일부터 시험방송 돌입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 4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의 허가가 결정된 지난달 26일부터 지상파 MMS 시험방송을 위한 무선국 준공에 착수했으며, 1월 2일부터 본격적인 시험방송에 돌입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CH19번을 번갈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상파 MMS의 기술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송파구·용산구와 인천·안양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일반 디지털 TV를 보유한 가구는 채널 5-1번에서 시험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MPEG-4 디코더가 내장된 TV(스마트 TV, 3DTV)를 보유한 가구는 5-2번도 시청할 수 있다. 시험방송 종료는 3월 31일까지며 지난달 24일부터 MMS 시험 전파를 송출하기 시작한 KBS가 지상파 MMS 시험방송 송출을 주도적으로 맡을 계획이다. EBS는 KBS가 방송 송출을 담당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며,

MBC와 SBS의 방송 송출도 KBS를 통해 이뤄진다. 이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험방송을 통해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이후 허용 채널 범위는 물론, 논란이 되고 있는 광고 허용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지상파 MMS 정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시험방송이 지상파 MMS를 둘러싼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에는 남아야 할 장애물이 많다. 특히 ‘낮은 직접수신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다. 지상파 MMS는 직접수신을 전제로 구축된 미디어 플랫폼인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이 MMS를 실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수신을 제고와 지상파 MMS가 서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주장도 있고 지상파 MMS가 미디어 공익

의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재송신 계약을 전제로 지상파 MMS 실현이 결국 유료방송 플랫폼의 채널만 증가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는 낮은 유료방송 가입비에 따른 유발효과로 인해 직접수신율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지상파 MMS를 찾던 속의 태풍으로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래부가 최근 지상파 방송 송출시설 공동화 및 소출력 중계기 확보, 추후 위성을 활용한 난시청 해소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뜻을 천명함으로써 직접수신을 제고에 이은 지상파 MMS의 성공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케이블 MSO의 8VSB 허용도 논란이다. 현재 8VSB 허용을 둘러싸고 초기 자본 투자 및 CPS 산정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지상파 MMS가 시험방송을 통해 본궤도에 오른다 해도 8VSB라는 거대한 장애물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8VSB 자체가 콘텐츠 저가화 및 특정 사업자에 대한 선심성 특혜라는 점은 물론, 궁극적으로 케이블 MMS의 현실화라는 점에서 지상파 MMS와 충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8VSB 허용으로 인해 지상파 MMS의 실현 가능성이 요원해졌다는 분석을 내리기도 한다.

광고 허용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일찌감치 지상파 MMS에 대한 광고 허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재원 없는 공익적 미디어 서비스가 과연 얼마만큼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소한의 재원확보가 없는 지상파 종일방송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 MMS 광고 허용 여부에 따라 해당 미디어 플랫폼의 성공 여부도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2면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신년사] 갑오년, 자랑스러운 방송 언론인을 생각하며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 희망의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12간지 중 행운의 7번째인 말은 박력과 생동감의 표상이며, 친숙함과 강인함을 뜻합니다. 전국의 방송기술인 여러분도 청마의 진취적인 기상과 기본 좋은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지난 2013년을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본격적인 지상파 디지털 전환 원년을 맞이했으며 새로운 정권 출범에 따른 방송정부조직의 이분화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UHD-TV 추진 로드맵 및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에 짝퉁 디지털 전환인 8VSB 허용 문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모바일 광개도 플랜 2.0과 같은 거센 도전에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또 공정방송을 정착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해직 언론인 문제는 물론,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문제까지 정신없이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KOBETA는 전국의 방송사는 물론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10월 2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시청자 복지 외면하는 방송정책 규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KOBETA를 중심으로 전국의 방송 언론인, 시민단체가 국회와 정부에 올바른 방송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투쟁의 발판이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이 마냥 투쟁과 도전으로 점철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4월 18일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BEA: Broadcasting Engineer Academy)을 정식으로 개소해 방송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의 역량을 재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커다란 성과입니다. 본 교육원은 미래미디어 방송기술 창의인재 양성사업은

통해 총 6개 분야 15개 과정 420명을 배출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또 23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KOBA 2013)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코바 월드포럼(KOBA World Forum)’을 새롭게 추진해 KOBA 2013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방송 전시회의 반열에 오른 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2014년 올해는 소치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인 대형 이벤트가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방송기술의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방송기술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의 중심이며,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행복 700플랜’으로 정리한 지상파 UHD-TV는 국민의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청자 복지 과제입니다. 700MHz 대역 방송 주파수는 당연히 국민을 위한 차세대 지상파 방송 서비스용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지상파 방송이 국민과 함께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인 시청자 복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새해에는 정부가 올바른 방송철학을 가지고 시청자를 위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전미개요(轉迷開悟)라고 합니다. 번뇌로 인한 미혹에서 벗어나 열반을 깨닫는 마음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불교 용어로서, ‘미망에서 돌아와 깨달음을 얻자’라는 뜻입니다. 갑오년 말미 해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방송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 힘차게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녕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성명서]

정부는 주파수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지하라!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진흥기본계획’과 ‘모바일 광개도 플랜 2.0’을 통해 1GHz 이상의 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천명하고 나서는 한편, 차세대 방송용인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를 통신 할당으로 전격 결정했다. 플랜에서 통신용으로 할당된 40MHz는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통신에 할당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위원장 고시로 결정되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없는 구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사항일 뿐이다. 당장 미래부가 해당 주파수 할당을 위한 공동 연구반의 존립근거를 훼손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공공의 재원을 통신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향후 5년간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공개하며 방송 주파수 민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방송법 제1조와 전파법 제1조에 명시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복리 증진’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정책이다. 차세대 UHD 방송에 반드시 필요한 700MHz 대역의 방송용 활용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유료방송을 위한 UHD 전라관 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본계획에는 통신사와 유료방송을 위한 전파활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지만, 지상파의 차세대 방송을 위한 주파수 계획은 전무하다.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지상파 UHD-TV 표준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술 보고서로 사실상 강등시킨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고 있다.

심지어 종합계획은 공공 주파수 이용대가 부과라는 전무후무한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는 주파수 자원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효율성만 강조한 졸속행정이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돈 잔치를 벌이던 미래부가 이제 공공성의 측면에서 활용되던 주파수에도 이용대라는 명목으로 돈을 걷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항공, 해상, 국방, 지상파 방송 등에 효율성을 가장하여 주파수 이용대가를 부과하려는 미래부의 정책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해 국가기관과 방송사를 대상으로 미래부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미래부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 심각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온전히 국민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주파수 자원을 통신사에 매각하는 한편, 지상파 UHD-TV와 같은 공공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유료방송 중심의 발전 정책만 수립하고 있다. 당장 모든 계획은 중지되어야 하며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를 지상파에 할당해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상파의 UHD 상용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UHD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니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미디어 서비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사설

2014년 주파수 정책, 걱정부터 앞선다

철학이 없는 주파수 정책

2014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의 방송은 여전히 안녕하지 못하다. 특히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전파진흥기본계획으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주파수 정책은 여전히 불안요소로 남아 대한민국 방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영화하려는 정부의 음모는 현재 진행형이다.

총체적 난국 주파수 정책, 졸속의 졸속

1.5GHz에 육박하는 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골자로 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오로지 통신사를 위한, 통신사에 의한, 통신사의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국내 통신 3사의 카르텔을 새삼 의식하게 만들 지경이다. 게다가 플랜 2.0은 700MHz 대역 방송용 필수 주파수의 상하위 40MHz 폭 통신용 할당을 은근슬쩍 확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40MHz 폭은 방통위원장 고시라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주파수 공동 연구반이 700MHz대역 주파수 활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700MHz 대역 주파수 일부 통신용 할당 결정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게다가 최근 정부는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처벌을 유예하며 해당 주파수 활용을 2021년 이후로 연기했다. 당연히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도 영향을 미친다. 효율을 최우선 가

치로 고려해 주파수 정책을 세운 것치고는 엄청난 졸속인 셈이다.

여기에 시청자 복지를 위한 지상파 UHDTV 발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공공시설의 주파수 이용료까지 고려하겠다는 전파진흥기본계획도 비판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주파수 공동 연구반의 행적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만든다. 주파수 정책의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올바른 주파수 활용이 이뤄지길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전파진흥기본계획이 외연을 확장할수록 공공재인 주파수의 기본적인 속성은 조금씩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주파수의 주인인 국민과 더욱 멀어져 간다. 보편적 UHDTV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700MHz 대역 주파수의 긍정적 활용도 요원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방송발전이 크게 휘청거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철학이 없는 총체적 난국인 주파수 정책에서 굼직굼직한 대형 이벤트가 많은 2014년이 방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엉망이 된 주파수 정책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파국을 맞이할 것인가. 그 해결의 실마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우리가 쥐고 있다.

진정한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세계로堂堂하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방송을 위한 주파수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로 협력해야 한다.

통합 방송법과 유료방송 규제 완화 각개격파 불가능하면 통합법으로 강행



고 방송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은 PP로, 다양한 유형의 비실시간 방송은 CP로 분류한다. 또 방송법상 종편과 보도 PP에 대한 소유제한 기준이 IPTV법상의 종편·보도 PP에도 적용되고, IPTV도 방송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국회 미방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과 기존 방송법에 IPTV를 포함시킨 통합 방송법인 셈이다.

이미 방통위는 관련 연구반을 통해 내부적으로 통합 방송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미래부도 규제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관련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부처간 논의 후 2015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두 부처의 공동 연구반을 발족하자는 의견이 있긴 했지만 방통위가 독자적인 연구반을 고집해 무산되었으며, 앞으로 연구반은 각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료방송 규제완화는 1차 입법에 실패했지만 2월 임시국회를 노리는 각자의 법안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통합 방송법으로 묶인 미래부-방통위 연구반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CJ 특별법 및 무리한 유료방송 규제완화가 궁극적으로 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축소시키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부당하다. 물론 통합 방송법이 거대한 시대의 조류라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특혜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으로 보인다. 통합 방송법의 기본 취지인 동일규제와 수평규제의 순기능이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김주욱 kjo@kobeta.com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불안한 출발

주파수 정책의 총체적 문제점 드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2023년까지 1GHz 이상의 통신용 주파수를 확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발표했다.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와 고화질 동영상 전송,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 간 통신(M2M) 등이 모바일 트래픽을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시킬 것이란 수요예측을 감안한 것이다.

플랜 2.0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단계는 2015년까지 700MHz 대역 40MHz 폭과 1.8GHz 대역 30MHz 폭, 2.6GHz 대역 40MHz 폭 등 총 110MHz 폭을 비롯해 2.6GHz 대역에서 40MHz 폭, 2.5GHz 대역에서 20MHz 폭 등 최소 60MHz폭을 추가 확보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1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GHz 대역 100MHz 폭을 회수해 최소 60MHz 폭을 LTE 용도로 재활용한다. 단, 700MHz 대역 주파수 40MHz 폭에서 무선마이크로 활용되고 있는 740~752MHz 대역은 2021년 이후에 활용 가능하다.

2단계는 2018년까지 최소 290MHz 폭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2.1GHz 대역 60MHz 폭, 2.0GHz 대역 40MHz 폭, 2.3GHz 대역 30MHz 폭 등 130MHz 폭이 대상이다. 동시에 3.5GHz 대역은 M/W 중계 등 기존 무선국 회수 및 재배치를 전제로 해당 대역에 최소 160MHz 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었던 와이브로 2.3GHz 대역 주파수(2019년 3월 만료) 40MHz 폭도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2단계에서 통신용으로 할당될 주파수는 290MHz 폭 이상이 될 전망이다.

3단계는 2020년까지 1.8GHz 대역에서 20MHz(재활용), 6GHz 이하에서 200MHz 폭을 할당해 총 220MHz 폭을 할당한다. 4단계는 2023년까지 무려 510MHz 폭을 할당하며 2.6GHz 대역 10MHz 폭, 6GHz 대역 이상에서 최소 500MHz 폭이다. 다른 단계에 비해

(1면에 이어)유료방송의 지상파 MMS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가 이어지는 것도 부당이다.

다만 이 대목은, 유료방송이 공익적인 이유로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주장하면서 지상파 MMS에 대해서는 과도한 영향력 증가로 반대하는 부분과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종합계획에 등장한 정부의 방침이 워낙 강경한 만큼, 유료방송의 반발은 그 자체로 원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유료

추상적인 수치인 만큼 220MHz 폭 이상을 통신에 할당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렇듯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최소 1GHz에서 많게는 1.5GHz 이상의 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골자로 한다. 동시에 정부는 와이브로 주파수는 물론, 가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모조리 통신에 할당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당장 모바일 트래픽을 근거로 통신사에 막대한 주파수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당위성이 핵심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는 물론, 소위 친 통신 언론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업그레이드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모바일 트래픽 해소에 있어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지만, 모바일 트래픽 자체가 3G 시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남발 및 무차별적인 가입자 유인에 따른 통신사의 원죄라는 점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1%의 해비 유저가 99%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소비 구조를 방지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통신 주파수 할당을 독려하는 점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모바일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통신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나 통신사 스스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개선을 발표해야 한다는 반론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통신사들의 모바일 IPTV 활성화를 통한 수익구조 활성화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또 미국의 경우 버라이즌과 AT&T가 총 21,5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면서도 총 200MHz 폭의 주파수를 할당받은 반면, 국내 통신사인 SKT와 KT는 상대적으로 적은 4,40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면서 290MHz 폭의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정당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주파수 정책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편이다. 주파수 정책의 파편화

를 야기한 근본적인 이유가 통신사의 막무가내식 주파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통한 무리한 주파수 정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700MHz 대역 무선마이크와 900MHz 대역 무선전화기 대란이다. 물론 정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나 작년 10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700MHz 무선마이크와 올해 말로 이용이 종료되는 900MHz 무선전화기 이용자에게 대해 최대 7년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700MHz 대역 회수에 있어 1단계에 해당되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의 난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발표와 동시에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플랜에 포함된 재활용 대역, 즉 SK텔레콤의 주파수 대역 회수시기, 용도와 관련해 통신 3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날을 세우고 있으며, 한국방송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보다 2배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해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의 공공적, 공익적 활용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이동통신의, 이동통신을 위한, 이동통신에 의한'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협회는 플랜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HD급 방송보다 4배에서 16배까지 높은 화질로 실감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UHD를 차세대 방송으로서 무료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700MHz가 40MHz 대역 폭 이상 통신용으로 할당된 것으로 못 박음으로써 700MHz 연구반의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재벌 이통사에게 주파수를 배정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진홍 rgdsz@kobeta.com

금과 같은 전향적인 스탠스를 유지할지는 불분명하다. 지상파 방송 4사의 협력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시험방송 기간에는 별도 주파수를 이용해 송출하기 때문에 직접수신 가구는 채널 채널정을 하면 MMS 추가 채널을 시청할 수 있지만, 추가채널을 본방송 주파수로 송출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방송 이용 가구는 지상파 MMS 추가채널을 볼 수 없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지상파 방송, 장비 공동으로 사용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올해부터 방송용 철탑, 국사(局舍), 송수신 설비, 소출력 TV 중계설비 등을 공동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 산정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미래부는 "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간오지 등 난시청 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고, 각 지상파 방송사간에도 커버리지 차이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TV 채널의 시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위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서는 각 방송사별로 방송보조국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설치 자체 비용이 과다할 뿐 아니라 설치 장소도 마땅치 않아 방송보조국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작년 6월부터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방송사 협의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가 서로의 방송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 라인은 크게 공동이용 대상과 절차 및 사용기간, 이용대가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용 철탑과 국사(局舍)의 경우 이용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동이용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 간 자율적인 협정 체결을 통해 이용토록 했으며, 최소 사용기간은 2년이다. 이용대가는 표준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와

운영비, 투자보수의 합으로 산정하되, 철탑의 경우 1개 단위(단수)당 철탑 내 최대 설치가 가능한 DTV 안테나 단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밖에 방송시설은 방송의 채널수로 나누어 산정토록 했다.

미래부는 "현재 공동 활용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시설(철탑, 국사)은 KBS 183개소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91개소이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존 임대료의 약 55%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윤현 방송진흥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의 활용 촉진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커버리지를 (공영방송 기준) 현재 96.2%에서 선진국 수준인 98%까지 높이고, 중복투자 방지 및 철탑 난립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 마디

"2014 갑오년 청마의 해, 올해의 사자성어는 전미개오(轉迷開悟)"(교수신문)
☞번뇌로 인한 미혹에서 벗어나 열반을 깨닫는 마음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불교 용어...정치 및 사회는 물론, 미래를 맞이하는 방송기술인도 새겨야 하는 말!

"이번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KBS·MBC 등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건 및 대가 산정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며...사실 이런 보도자료에 명시된 말입니다. 미래부가 정책을 발표하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기를!

8VSB, 이르면 5월 추진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으로 분류되는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2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한 후 5월에는 정식으로 8VSB 허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 예고에 돌입하면 일정이 늦어질 확률도 있지만, 적어도 6월에는 해당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당장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는 오명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은 심각한 결격사유다. 여기에 케이블 MMS 현실화와 지상파 MMS가 상충되는 문제는 지상파 방송의 형제화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 PP 퇴출을 막기 위해 컨버터 비용을 아우르는 막대한 초기 사업비도 변수로 부각된다. 미래부가 컨버터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날로그 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문제는 더욱 답아오를 전망이다. 물론 CPS 문제도 변수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부의 8VSB 허용이 예상대로 진행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붕괴와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비판속에서 시작되는 8VSB 허용이 막대한 초기 사업비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직면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부는 해당 정책의 추진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벌써부터 디지털 전환율이 높은 MSO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방송기술저널 창간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최동환	편집주간 이성의
편집위원 김윤중 서상원 장진영	송주호 박명석
편집장 최진홍	취재기자 백선하 이진범 김주욱
기획실 강동훈	인쇄인 성진&화성프린원
주소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총관 15층
전화 02-3219-5635	팩스 02-2647-6813
트위터 @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미방위 또 파행 ... 법안 처리는 언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개선 법안 등 산적한 법안

지난달 24일로 예정돼 있던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유료 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법안 등 주요 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번 전체회의가 취소됨에 따라 미방위는 지난달 26일과 30일로 예정된 지난 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건의 법안도 올리지 못하는 상임위원회가 된 것이다. 16개 상임 위 중 법안 처리 실적으로 최악의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만큼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해지 언론인 복직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줄여지지 않아 파행을 거듭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방송공정성특위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법안소위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에 미방위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공약이자 지난 3월 여야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합의된 ‘연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법(공영방송 지

배구조 개선) 처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는데도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 법안’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조차 거부하며 기본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묵살한 채 여당 단독 막가파식 법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야 합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KBS 이사회 구성 문제다. 앞서 국회방송공정성특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특별다수제’는 KBS 이사회 구조처럼 여·야 추천 비율이 정해져 ‘과반수’를 정족수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장치로 과반이 아닌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 찬성’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공정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회 인원을 12명으로 늘리고 모든 이사진을 노사가 합의 인사로 추천하되, 사장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한 뒤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이 같은 방식은 소수

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도한 특위에서도 결론을 못낸 문제를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며 “(보이콧으로) 책임감 없이 모든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방위는 전체회의를 취소했고, 본회의에 미방위 관련 법안을 단 한 건도 올리지 못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해지 언론인 복직 문제 등을 비롯해 업계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켰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모두 발이 묶인 상태다. 당장 올해 상반기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올해 2월 임시국회나 4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감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활동기간이 연장된 국회방송공정성특위의 빈손에 이어 미방위 마지막 전체회의 취소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관련 합의안과 법안 처리를 못하고 있는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체가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TV 화이트 스페이스 발굴, 방송 망치는 졸속의 졸속

난시청 해소 및 UHD 발전 등의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원하고 있다. 이에 지상파는 해당 주파수의 일부만 ‘릴려 주면’ 4K, 8K로 넘어가는 미디어 격변기에 주파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국민행복 700 플랜’을 발표하며 주파수 수급에 열정적으로 뛰어든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한 슈퍼 와이파이에 뛰어 들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 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작년 8월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발굴해 슈퍼 와이파이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MBC, 제두테크노파크, 케이블콘소시엄, 한국전력공사(자체부담), 위월드(자체부담) 5개 컨소시엄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해 정식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5개 컨소시엄은 미래부로부터 시범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정부 지원금 3억5,000만 원과 자체 부담금(현물포함)을 포함해 총 16억4,000만 원을 투입해 장비를 개발했다.

하지만 TV 화이트 스페이스 발굴을 통한 슈퍼 와이파이 기술 등의 활용은 과도한 주파수 쥐어짜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디지털 전환

이후 방송이 활용하는 주파수가 상당 부분 축소된 상황에서 시청자의 시청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무분별한 TV 화이트 스페이스 발굴은 그 자체로 패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TV 화이트 스페이스 발굴은 방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세밀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TV 화이트 스페이스 발굴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DB 작업이 졸속으로 처리된 부분은 커다란 부담이다. 최근 미래부는 TV 화이트 스페이스 발굴을 위한 DB 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론은 실망 그 자체였다. TV 화이트 스페이스 발굴에 있어 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방송사 허가증 내부의 방송구역’과 ‘전파 시뮬레이션 교집합’으로 단순하게 산출했기 때문이다.

방송전파가 도달하는 모든 지역을 1순위로 보장하고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발굴해야 함에도, 미래부는 전파의 속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평면적인 DB를 구축했다. 심지어 수도권 특정 지역의 경우 만약 2개 이상의 방송 신호가 잡히다면, 1개의 방송 신호만 인정하고 TV 화이트 스페이스를 발굴하기도 했다. 또 TV 화이트 스페이스 발굴 당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후의 DB 협의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미래부는 DB를 발표하며 추후 논의를 계속한다고 밝혔지

만 전파의 속성을 완전히 무시한 졸속 행정처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DB 발표장에서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이 “짧은 시간에 완벽한 DB를 구축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TV 화이트 스페이스는 지상파 방송의 혼간섭을 방지하여 방송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그야말로 ‘시청자 보호를 위한 대역’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를 TV 유훈대역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남아도는 주파수 자원인양 포장하여 다른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하고 무료 보편의 지상파 방송 존립 목적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다. 그런 이유로 2012년 9월 21일 구 방통위가 전파법의 하위 법령인 ‘무선설비규칙 개정(안)’을 통해 TV 화이트 스페이스 대역을 통신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방송 진영에서는 강력히 반대했었다. 한 마디로 TV 화이트 스페이스는 지상파 방송 주파수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혼선 방지 마지노선’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슈퍼 와이파이같은 기술에 맹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보편적 방송 서비스의 붕괴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게다가 TV 화이트 스페이스의 필수조건인 DB도 졸속으로 작업되는 이상, 미래부의 야심찬 계획은 시작부터 휘청이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주파수 공동 연구반, 결국 연장으로 ‘가닥’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 공동 연구반의 활동기간이 전적 연장됐다. 조만간 가시적인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2월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동연구반의 이 같은 결정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방송과 통신의 힘겨루기가 공공과 상업의 영역을 넘나들며 전방위 공방전으로 번지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된다. 덩달아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배도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게 됐다.

현재 방송사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규정하며 난시청 해소 및 UHDTV 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을 공공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더 많은 시청자에게 양질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여기에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가 통신사의 사유물이 아니며, 주파수의 민영화와 사영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상황판단이 깔려있다.

흐름도 좋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활용을

통해 난시청 해소에 적극 나서면 현재 미래부가 추진하는 방송송출 장비 공동활용 및 소출력 중계기 증설과 더불어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 사업에 있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KBS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는 대한민국형 지상파 UHDTV가 세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새로운 뉴미디어 영역을 공격적으로 개척할 수 있다는 유인효과도 상당한 편이다. 2000년대 중반 정부가 미국식 디지털 전송방식을 채택하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러 대한민국의 미디어 플랫폼이 지금까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700MHz 대역의 방송 할당은 신의 한 수라는 평가다. 그런 이유로 방송사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 UHD로 드래핀 ‘국민행복 700 플랜’을 통해 정부와의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미래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찬 물을 붓고 있다. 최근 미래부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발표하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및 무분별한 데이터 트래픽을 자초하는 통신사에게 막대한 주파수를 할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또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의 영역에 대한 주파수 이용대가를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사실상 주파수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일부가 통신용 할당으로 정해져 있다. 구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40MHz 폭 할당을 정한 것을 그대로 계승한 셈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지상파 UHD 전락 배제와 맞물려 공동 연구반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뇌관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 연구반의 활동 연장이 전격적으로 결정된 가운데, 사실상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은 2014년 상반기에도 정해지지 어렵게 됐다. 2월부터 다시 논의에 돌입한다고 해도 방통위 상임위원 교체 및 논란이 되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등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주파수 할당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씨앤엠 매각, 방송 시장의 화두로

케이블 MSO인 씨앤엠이 방송 시장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가 씨앤엠을 매물로 내놓은 상황에서 수도권 최대 케이블 사업자를 품기 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방송 사업자 간 인수합병에 청신호가 켜진 점도 호재다. 지루하게 끌려온 씨앤엠 인수합병설이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당장 CJ 헬로비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강원방송을 인수하며 작년에만 총 4개의 SO를 합병한 CJ 헬로비전의 공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012년 하반기 중시에 입성해 공모자금을 인수합병에 쓰겠다고 공언하며 419만 가입자와 23개 SO를 거느린 CJ 헬로비전이 씨앤엠을 인수할 경우 총 가입자 숫자가 667만으로 늘어나게 된다. 당장 케이블 1위를 넘어 IPTV를 보유한 KT의 강력한 대항마로 거듭날 수 있다.

IPTV를 보유한 SK텔레콤도 씨앤엠 인수에 뛰어 들 가능성이 있다. 모기업인 SK브로드밴드가 통신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IPTV 시장에서는 KT에 열세인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씨앤엠 인수에 뛰어 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KT가 위성방송과 망을 활용한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SK텔레콤의 씨앤엠 인수 가능성을 조금씩 고조시킨다. 망이 취약한

방통위 유사보도 지정, 매체 흔들기?

지난해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유사보도 실태조사결과의 역풍이 상당하다. 유사보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데다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매체를 혼드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방통위는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방송, 교통방송, 증권방송 등이 보도를 하고 있다며 유사보도 프로그램 목록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이경제 위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유사보도는 불법방송’이라고 선언한 이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제도를 개선하려는 의도”였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 파장은 만만치 않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방통위의 정책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유사보도로 지정된 매체들도 방통위의 결정이 정부 비판 매체에 대한 ‘언론 재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사보도로 지정된 매체 중 CBS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CBS는 방통위의 유사보도 목록

LG유플러스도 잠재적 인수 대상자다.

이런 상황에서 씨앤엠을 매물로 내놓은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가 설립한 국민유선방송투자의 움직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씨앤엠이 용산, 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270만 명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으며 자산이 1조 원에 달하는데다 2010년 기준 연 매출 5,000억 원, 영업이익 1,000억 원 규모의 거대 MSO로 성장한 만큼, 2007년 말 투자자들의 인수 이후 5년이 넘는 현재가 차익 실현이 가능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씨앤엠 인수가 예상외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작년 초 MBK파트너스와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가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고위 실무진에게 작년 하반기를 목표로 씨앤엠 매각을 의뢰했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딜’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과정에서 골드만삭스 PIA가 보유하던 씨앤엠의 경영권 외 소수 지분 30.5%를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가 6,250억 원에 사들이고 지분 인수 경쟁을 벌였던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이뤄 3달이 지나서야 이민준 전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경영권 지분 65%를 1조 4,500억 원에 인수하는 투 트랙 전술로 공을 들인 만큼, 실제 매각에는 최소 3조 원대의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매가 딜’인 만큼 인수합병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에 자신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누가 누구 보고 유사보도라고 규정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평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자 상황은 더욱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CBS는 종교방송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국으로서 1970년 군사정권을 거치며 민주화 운동에 커다란 역할을 한 매체다. 이에 신군부 시절에는 언론 통폐합이라는 미명하에 TBC와 동아방송이 사라지고 CBS는 보도와 광고 기능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당시 CBS는 극적으로 보도와 광고기능을 부활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CBS의 역사로 굳건히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모든 판단을 유보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추후 법률계 정리된 후속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방통위 차원의 사후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홍 rgdsz@kobeta.com

UHD, 다양한 라인업으로 각개전투 돌입

미래 방송기술의 정수이자 거대한 조류로 여겨지는 UHDTV를 둘러싼 제조사들의 행보가 거침없다. 초대형부터 보급형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라인업을 무기로 글로벌 제조사의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UHD 시장 자체의 팽창력을 동력으로 하는 공격적인 마케팅도 뜨거운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세계 최대인 110인치 UHDTV를 출시한 삼성전자의 행보가 매섭다. 현재 상용화된 UHDTV 중 가장 커다란 크기인 본 제품은 가로가 2.6미터, 세로가 1.8미터에 달한다. 일반가정에서 쉽게 설치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여겨지며, 가격은 약 1억6,000만 원이다. 물론 삼성전자가 110인치 UHDTV를 처음 선보인 것은 지난해 1월에 열린 CES 2013이었지만, 상용화 궤도에 오른 첫 제품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하지만 UHDTV 시장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첨예한 충돌지점은 ‘보급형’이다. 디스플레이 서치의 3분기 UHDTV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일본의 소니가 23.4%의 점유율로 1위를 수성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2자리 점유율을 기록한 삼성전자(10.1%), 그리고 그 뒤를 맹렬히 추격하는 LG전자(9.8%) 모두 보급형 UHDTV를 바탕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UHDTV 시장규모가 2013년 29억7,000만 달러에서 2014년 91억1,000만 달러, 2015년 111억5,0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디스플레이서치 발표) 상대적으로 저렴한 44인치와 65인치 UHDTV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주도권 전쟁의 추이는 자연스러운 가격인하 효과와 더불어 2014년 1월 CES를 기점으로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제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UHDTV 발전이 그 열기를 더해 갈수록 덩달아 ‘발전의 주체’를 둘러싼 논의도 달아올로 전망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과 위성의 UHD 표준 모델을 확정하는 한편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토대로 지상파를 배제한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정책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최근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래부 산하 TTA의 지상파 UHDTV 표준이 좌초된 상황에서 보편적인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가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변질되는 부분은 엄청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지상파에 광고 총량제 허용으로 가닥 중간광고는 수신료와 연동해 논의

지난달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규ణ발전위원회(이하 규발위)가 심의해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정책 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시작해 1월 중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열고 2월에 방송광고제도 개선 정책방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지상파 중간광고는 추후 수신료 현실화와 연동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고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은 지상파 방송의 광고 총량제 허용 검토가 핵심이다.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도 유료방송과 같은 광고 총량제를 도입해 프로그램 및 토막, 자막광고 등 방송광고 종류별 개별규제를 폐지하고 시간당 평균 10분에서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고 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법으로 정하고, 방송사가 광고 유형·시간·횟수·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또 방통위는 유료방송도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를 폐지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매체 경쟁력 차이를 감안해 현재 광고 시간을 최대 12분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간접광고 및 광고 금지 물품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방침이다. 규발위는 간접광고와 협찬 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의 일관성을 갖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규정과 협찬고지 규칙 개정작업을 시작할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규발위는 지역·중소방송 방송광고 지원을 위해 KBS 수신료 현실화에 따른 KBS 2TV 광고변화를 전제로, 공영립과 민영립별로 지원받고 있는 중소방송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건의했다. 여기에 미디어렐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고 라디오 광고진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라디오 광고지원 전문기관' 설립도 논의할 예정이며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기금' 설치도 타진한다.

논란이던 지상파 중간광고는 일단 '유보'다. 규발위가 KBS 수신료 현실화와 연동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방통위에 건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규발위는 "지상파 중간광고는 국제기준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원칙에 맞게 허용이 필요하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정부는 지상파 UHD를 버렸다 케이블에 이어 위성 UHD 표준 마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최근 79차 표준총회에서 UHD 디지털 위성방송 송수신 종합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케이블에 이어 위성방송에도 UHD 상용화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상파 UHD 표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전략을 짜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당장 정부가 UHD를 프리미엄 서비스로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지상파 UHD를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11월 14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정책을 추진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은 정부가 12월 10일 후속안을 통해 지상파 UHD 정책 추진에 대한 여지를 남겼으나, 막상 지상파 UHD 표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기술보고서로 하향 채택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케이블에 이어 위성에 대한 UHD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사실상 UHD 정책에 있어 지상파의 역할을 배제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현재 지상파는 KBS를 중심으로 UHD 2차 실험방송을 성공리에 종료하는 한편, 그 기술력을 세계에 인정받고 있다. 동시에 지상파는 보편적 UHD를 통해 고품질 미디어 서비

스를 누구라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차세대 방송기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패착을 저지르고 있다. 동시에 지상파 UHD 표준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며 케이블과 위성 UHD 상용 서비스만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출력중계기 및 방송시설 공동화 등으로 난시청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커버리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단순 시청권 보장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다양한 방안을 통한 난시청 해소 및 시청권 보장도 중요하다. 하지만 UHD를 중심으로 하는 고품질 미디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난시청 해소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도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당장 유료방송 중심의 UHD 정책은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미디어 서비스라는 비판과 더불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지상파 UHD의 싹을 잘라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최진홍 rgdsz@kobeta.com

단신 뉴스

지난달 20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뉴스타파가 제15회 민주시민언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시민언론상 심사위원단은 "2012년 1월 해직언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뉴스타파는 가성 언론이 외면한 우리사회 주요 이슈의 본질을 추적하고 사건의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저널리즘'의 정신을 잃지 않고 언론의 임무기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세 피난처 및 국정원 정치공작 등을 집중보도한 뉴스타파는 2012 미디어공공성포럼 언론상부터 제16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특별상까지 올해에만 총 6번을 수상한 진기록을 남겼다. 한편 심사위원단은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에 특별상을 수상하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등 사측은 보복인사를 강행,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 봉쇄에 나서며 짝퉁 한국일보를 제작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며 "두 달 가까이 봉쇄된 편집국 앞에서 저항한 한국일보 비대위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옳은 결정,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언론상은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언론개혁과 시민언론운동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한국방송협회는 우원길 전 SBS 사장의 뒤를 이어 이웅모 현 SBS 사장이 신임 한국방송협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우원길 전 사장이 수행하던 한국방송협회장직을 이웅모 현 사장이 이어받은 것이다. 한국방송협회는 2013년도 5차 이사회를 통해 이웅모 SBS 사장을 정식으로 회장에 선출했다고 밝히며 내년 총회 개최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웅모 신임 회장은 SBS 제작본부 교양총괄국장, SBS아트랙 대표이사 사장, SBS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일 SBS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KBS <추적60분> 중징계에 이어 JTBC <뉴스9>에 보도 프로그램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 심의' 논란이 가열되

‘본말이 전도된’ 전파진흥기본계획 전파는 공공재 … “효율성에 앞서 공공성 전제돼야”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파활용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일 전파법 제8조에 따라 전파 이용 촉진과 전파방송 산업 진흥을 위해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전파진흥기본계획이 경제성과 효율성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공공재인 전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공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파진흥기본계획 확정 2주전에 열린 공청회에서도 전파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듭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전파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한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생산 17조 5,692억 원, 부가 가치 4조 9,780억 원, 고용 6,729명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부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도약과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 소통의 전파 활용'이라는 핵심 정책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전파방송 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전파자원 공급 관리 최적화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제도 구현이라는 3대 전략과 10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전파진흥기본계획 그 어디에서도 전파의 공공적·공익적 활용을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경제적 효율적 사용만이 강조된 본말이 전도된 계획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더라도 공공적 공익적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파진흥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미래부가 내놓은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보고 "아이러니하다"는 평을 내놓은 뒤 "전파는 희소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공공성을 언급해야 하는데 (미래부의 안에는) 왜 자꾸 경제성 효율성만을 언급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도시를 건설할 때도 산업적인 건물과 공원을 같이 만드는데 방송이 바로 그 공원 같은 역할을 한다. 방송은 주파수 없이 존재할 수 있는데 방송에 대한 언급 없이 전파의 통신 활용만 논의되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 활용에 있어서 미래부의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흥수 한국방송협회 실장도 "무조건 효율성만 강조하면 방송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전파 활용에 있어 방송과 통신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주파수 사용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왔는데 정부는 차세대 방송에 대한 기반조차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에 차세대 방송을 위한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파진흥기본계획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 국방부도 돈 내고 주파수 싸야 하나?

더 큰 문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현황 및 적정 가치 연구, 유휴 주파수 반납 유인 방안 등

은 상황에서 CPS 과금 논의는 시기상조며 8VSB를 도입하더라도 요금 인상이 거의 없어 재전송료를 주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마치 막으로 이들은 "지상파가 8VSB 도입을 반쪽짜리 디지털 전환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채널에 CPS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만약 지상파가 8VSB 채널에 CPS를 부과한다면 집단적으로 반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케이블 MSO들의 8VSB 대상 채널에 대한 CPS 과금 불가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초 지상파 방송사들은 8VSB 허용이 방송산업발전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대상이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8VSB 허용은 케이블 MMS의 성격을 가지며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 공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하지만 정부는 8VSB 허용을 강행하며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지상파에서 아무리 온전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음에도 정부와

8VSB에 CPS 부과해야 할 줄 몰랐나?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이 정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별 관심이 없던 케이블 MSO에 대한 특혜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상황에서 8VSB 허용 대상 채널에 대한 CPS 과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당장 재송신 분쟁이 재연되며 지상파와 케이블 MSO의 첨예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8VSB 허용 대상 채널은 당연히 CPS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케이블 MSO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케이블 MSO와 지상파의 CPS 계약에는 'HD 디지털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전송료 요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지상파가 8VSB 대상 채널에 CPS를 과금한다면 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케이블 MSO들은 "8VSB에 CPS를 과금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팔쩍 뽐고 있다. 동시에 이들은 "상품 가격을 인상할지도 결정되지 않

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말하자면 공공기관의 주파수 활용에도 이용대가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방송 주파수 사용료 도입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이용에 대가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을 가능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으로 공공용 주파수가 전체 가용 주파수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한정된 주파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송국 관계자는 "효율적 사용에 앞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더 공익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진정한 효율적 활용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정부 관계자 및 다양한 분야의 학계 연구계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기반으로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논의했으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여전히 통신에 편향적인 주파수 활용 계획만 담고 있었다. 공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무늬뿐인 공청회, 공익없는 전파 계획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 소통의 전파 활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래부의 아이러니한 행보에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케이블 MSO, 종편은 '디지털 전환이 맞다'는 이유로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을 실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CPS를 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후안무치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다.

케이블 MSO에 대한 8VSB 허용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당장 아날로그 수상기를 가진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들의 시청권 문제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컨버터 비용, 거기에 콘텐츠 시장 저가화와 보편적 플랫폼 말살이라는 재앙이 예고된다. 그런 이유로 현재 케이블 MSO 사이에서는 8VSB 허용을 주장하면서도 디지털 전환 비율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케이블 MSO, 그리고 무엇보다 종편이 원하는 8VSB 허용은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 이제 그 특혜에 대한 무게를 견딜 차례다. '온전한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고 지상파 방송사가 주장한 부분을 묵살하고 정부와 케이블 MSO, 종편이 "8VSB는 디지털 전환이 맞다"는 주장을 펼치며 강행했다면, 헌법적 가치에 의거한 CPS 대가산정 협상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것에 중론이 쏠리고 있다.

최진홍 rgdsz@kobeta.com

영해야 하는데 이를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다른 종편 방송사에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JTBC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중적"이라며 회의 도중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에 정치권과 사회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론은 들끓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종북몰이'에만 해당하는 '종박심'의 기구라는 사실이 다짐 명백해졌다"며 방통심의위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JTBC 심의와 달리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종북'으로 매도하고 저주한 TV조선 <판>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제시'로 무마했다"면서 "방통심의위는 <뉴스9>에 내린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지금까지 자행한 정치 심의, 표적 심의에 대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PD연합회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방통심의위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TF팀을 꾸려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야당 추천 위원들의 '보이콧'과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방통심의위의 구성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지난달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시에 언론노조는 최근 활동이 종료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19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해직 언론인 복직을 위해 앞장서기로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8개월 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긍정적인 논의가 특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이진범 jnb1001@kobeta.com

직접수신율 하락, 해법은 없나 (下)



누구나 안테나만 달면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보편적 화질을 통해 보편적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수신율을 높여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4. 공시청 설비도 공공재다 ... 인식 변화 필요

공시청 설비는 공공재에 가깝다. 지상파 방송은 누누이 강조했듯이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은 공시청 설비만 갖추고 있으면 따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지만 공공재는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다. 공시청 설비도 이런 공공재의 속성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공시청 설비=공공재’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다.

신진규 MBC 디지털기술국 기술관리부장은 “우리나라 유료방송 요금이 저가로 고착화됨에 따라 정부도 그렇고 시청자도 그렇고 공시청 설비, 지상파 직접 수신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이라는 무료 보편적인 플랫폼은 미디어 환경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누구나 무료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공시청 설비와 같은 수신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2004년 법 개정에 따라 2004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분리배선을 의무화했다. 반면에 2004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 케이블 방송사들에 의해 대부분의 공시청 시설이 훼손된 상태다. 주택법 제42조에 따라 공시청 시설을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당 법이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KBS 난시청서비스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SO들이 고의로 공시청 안테나를 훼손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의 실효성의 의문을 표했다.

또한 주택법 제47조를 보면 공시청 설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부분수리(5년), 전면교체(15년)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나와 있지만 이 역시도 유명무실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자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현행법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점검주체, 점검시기 등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기에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

다. 이에 대해 신진규 MBC 디지털기술국 기술관리부장은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해야 하는지, 누가 점검하는지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특히 점검 주체의 경우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가 맡아야 한다. 이러한 선구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공시청 설비 시설은 제대로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 지상파도 AS지원 센터가 필요

법 개정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또 다른 하나는 ‘지상파 통합 서비스 지원 센터’다.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유료방송의 경우 TV가 안 나오거나 하면 바로 와서 고쳐주는데 지상파 방송의 경우 애프터서비스 구조가 확립되지 않아 감감 무소식일 때가 많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유료방송 대비 지상파 수신 업무의 유지·보수·관리 시스템과 조직력이 부족하며, 지상파 방송 4사의 수신지원부서는 실질적으로 장기적 조직유지 및 인력수급 등이 불확실해 현실적으로 지상파 공시청망 유지·보수·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지상파 방송 공시청 시설 공사 이후에도 유지·보수·관리를 할 주체가 따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료 보편적 플랫폼인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지상파 통합 서비스 지원 센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설립된 DTV KOREA를 중심으로 지상파 통합 서비스 지원 센터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DTV KOREA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위탁사업 중 하나로 ‘지상파 124 콜센터’를 운영해왔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민원, 안테나와 컨버터 등 정부지원 신청, 채널재배치 민원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직접수신가구의 정부지원 시청 장비에 대한 민원, 지상파 직접수신용 안테나 구입 문의, 공시청 설비 지원 접수 등의 업무도 처리해왔다. 학계를 중심으로 한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업무의 연장선으로 플랫폼 주체인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인 DTV KOREA가 지상파 통합 지원 센터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주무부처와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그동안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직접수신율 하락 원인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상파 통합 서비스 지원 센터 구축으로 조금이나마 시청자 복지 실현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과 직접수신율이라는 이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다채널 서



비스(MMS)의 부재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서 MMS 정책을 언급한 부분은 환영할 만하다. 또한 방통위가 KBS의 MMS 실험국을 허가했다고 하니 MMS는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MS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마저도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MMS가 시작된다면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을 상승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혁범 KBS 난시청서비스부 디지털시청100%재단 차장은 “요즘 직접 수신 문의 전화가 오면 처음에 묻는 말이 ‘채널 몇 개 나와요?’다. 심지어 시골 어르신들도 몇 개 나오냐고 묻더라”면서 “MMS가 허용되면 직접수신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이 MMS로 다양한 방송을 하게 된다면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격차도 해소될 것이다.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왜 하락했는지 그 원인을 따져봤다. 가장 큰

문제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었다.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 무리하게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추진했기에 유료방송으로 갑작스럽게 갈아탄 가구가 많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물론 지상파 방송 4사도 공시청 설비 지원 사업 등에 있어서 안일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따지는 것은 부질없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무료 보편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냐에 머리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공시청 설비도 공공재라는 인식 변화 △법·제도적 개정 필요 △지상파 통합 서비스 지원 센터 △MMS의 조속한 시행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직접 수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안테나만 달면 누구나 보편적 화질로 보편적 콘텐츠를 보편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부는 법 제도 개정을 통해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직접 수신 환경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주파수 민영화는 해답이 아니다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담론이 거세다. 비록 철도노조가 국회 소위 구성을 계기로 파업 철회를 선언했으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여전히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절대 민영화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당장 JR 계열 7개 회사 등으로 철도를 분할해 민영화한 일본과 이미 오래전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영국과 독일의 사례가 널리 회자되며,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의료 민영화와 더불어 국민의 불안감만 부추기고 있다. 공공 인프라의 성급한 민영화는 그 자체로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 국민이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에 신경을 빼앗긴 나머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주파수의 민영화. 철도, 의료와 달리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주파수의 민영화가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주파수는 방송 및 통신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여파는 철도, 의료와 맞먹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다.

주파수는 일종의 자원이다. 열차가 달리려면 연료가 필요하듯이, 방송과 통신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움직이려면 주파

수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연료는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며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위임받아 그 활용처를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익과 사익의 영역에서 적당히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공공의 자원인 주파수를 전격적으로 민영화하려 한다. 작년 12월 모바일 공개토론편 2.0을 발표해 앞으로 새롭게 발굴할 막대한 주파수를 통신사에 전격적으로 할당한다고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통신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KT의 민영화 이후 통신 사업자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 사업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심지어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과 비교해 적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윤 극대화를 위해 막대한 주파수를 낭비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런 이유로 미래부는 옛 정보통신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통신사와의 긴밀한 카르텔을 유지하며 막대한 주파수를 통신사에 무작정 밀어주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 재산을 사기업에 모조리 몰아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화물점정은 따로 있다. 바로 모바일 공개토론편 2.0이 등장한 직후 앞으로 5년 동안 중장기 주파수 활용방안

을 골자로 하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기관 보유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 주파수 이용현황과 적정가치 연구, 유휴 주파수 반납 유인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공익적 주파수 활용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이용대가를 물리겠다는 뜻이다. 물론 미래부는 당장 이용대가를 부과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소위 ‘공짜 주파수’를 당장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공공용 주파수가 전체 가용주파수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방송용 주파수를 포함하면 전체 가용 주파수의 약 50%를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용 주파수가 공익적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또 기술발전과 트렌드 변화에 맞춰 주파수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나 논의작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고 있다.

정리하자면 공공 주파수가 방만하게 활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니 이 기회에 이용대가를 물리든 재배치를 하든 주파수 공공의 활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견 효율적인 면에서 맞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는가? 이들의 주장은 철도 민영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소

름 끼치도록 닮아있다.

보수는객으로 유명한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JTBC 〈뉴스 9〉 신년특집에 출연해 철도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공기업들의 방만 운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는 “철도 민영화를 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가 400조에 달하는데 야당 주장처럼 공공요금도 있지만 방만 경영 문제가 크다”며 함께 출연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즉 전 원장의 논리는 철도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니 효율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민영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 원장의 발언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과 달리, 공공의 인프라를 민영화시켜 결국 사익의 도구로 삼길 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들은 공공의 인프라가 가지는 단점을 극대화시켜 결국 사익의 도구로 환치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파수도 마찬가지다. 공공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국민의 재원을 효율 만능주의에 입각해 무작정 사익 중심으로 넘겨 버린다면 우리 모두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원인 주파수를 성급하게 민영화 시키지 말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최진홍 rgdsz@kobeta.com

2014년 방송의 갈 길, DTV 전송방식 투쟁의 역사에서 묻다

대위기의 시대. 백척간두에 선 우리는 시대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기본적인 질문이 우리를 2000년대로 자연스럽게 안내한다.

현재 대한민국 방송은 거대한 사영화의 바람에 휘둘리고 있다. 정부는 공공의 인프라를 해체하여 사익을 위한 도구로 둔갑시키는 한편, 허망한 경제적 낙수효과를 꿈꾸며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방송은 자신의 역할을 잡지 못하고 치명적인 방향 속에서 표류하며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은 조금씩 사양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대위기의 시대. 백척간두에 선 우리는 시대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기본적인 질문이 우리를 2000년대로 자연스럽게 안내한다.

이에 본지는 신년기획으로 '2014년 방송의 갈 길, DTV 전송방식 투쟁의 역사에서 묻다'를 통해 끈질기게 순환하는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며 그 해답을 찾아본다.

1부. 꿈틀대는 DTV 전송방식, 그 뜨거웠던 시간

2014년을 맞이한 우리가 왜 갑자기 2000년대 DTV 전송방식 투쟁으로 고개를 돌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겠지만,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현실의 불안과 미래의 비전은 과거에서 기인한 역사적 결론에서 생각지도 못한 해답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의 진실이 현재와 미래에도 진행형이라면, 모든 것은 더욱 명확해진다.



[사진 1] 2000년 9월 28일 DTV 전송방식 재검토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사진 2] 2000년 11월 20일 DTV 전송방식 재검토 관련 간담회 개최



[사진 3] 2000년 11월 22일 방송위원회 디지털 지상파 DTV 전송방식 공청회 개최

2000년대는 방송의 발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 1996년 12월 24일 미국 FCC(미연방통신위원회)가 ATSC 방식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이래, 1997년 3월 28일 대한민국은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해 9월 23일 추진협의회는 ATSC 방식을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방식으로 채택할 것을 당시 정보통신부에 제안한다. 그리고 11월 정보통신부는 미국방식을 전격적으로 채택한다. DTV 전송방식에 있어 첨예한 충돌의 지점은 미국식과 유럽식의 선택

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1997년 주파수 효율이 떨어지고 추후 방송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미국식을 택한 것이다.

이후 상황은 숨 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당장 1998년 5월 대만이 미국방식을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전격 채택하고 뒤이어 영국과 미국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속속 시작했다. 그러자 대한민국은 1999년 7월 경제부처차관 회의에서 디지털 지상파 TV 조기 방송 종합계획을 채택하며 정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11월 2일 미국 싱클레어 방송그룹이 FCC에 지상파 DTV 전송방식 재검토를 요청하며 미국식 전송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물론 2000년 2월 FCC가 싱클레어 방송그룹의 청원을 기각했지만 그해 7월 미국 하원은 조유의 전송방식 청문회까지 열어 장고에 들어갔다. 기나긴 싸움의 시작이었다.

2000년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KOBETA)는 7월 1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DTV 전송방식 비교현장 실험을 요청한다. 또 7월 27일 KOBETA는 DTV 번조방식 재검토 요청 질의서를 방송위원회에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KOBETA는 8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시청자연대회의와 함께 DTV 전송방식 재검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부 압박에 돌입했다. 또 8월 10일에는 조광환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위원장 면담과 8월 16일에는 박종웅, 김일운, 원희룡, 남경필, 정병국, 정동영 의원 등과 연이어 면담을 한다. 이 과정에서 8월 19일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동시에 8월 22일에는 KOBETA 특보가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8월 25일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 면담에 이어 9월 28일 성유보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는 10월 4일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주최 정책 토론회로 결실을 맺게 된다. 이어진 상황은 급박했다. 10월 18일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정보통신부가 비교 필드 테스트 조건부 허용 및 지원을 발표했으며 11월 22일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DTV 전송방식 공청회와 12월 8일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다.

2001년으로 들어서며 DTV 전송방식을 둘러싼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1월 1일 시민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시작으로 1월 9일에는 KOBETA가 주최하는 방송위원회 위원 설명회가 열렸다. 그러자 2월 21일 방송위원회가 DTV 전송방식 비교 필드 테스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표명했으며 4월 20일 한국방송협회 이사회는 방송위원회가 비교 필드 테스트를 실시한다면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4월 26일, MBC가 전격적으로 방송위원회에 비교 필드 테스트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5월 2일에는 방송위원회가 그 후속조치로



[사진 4] 2001년 2월 12일 DTV 방송방식 국제세미나



[사진 5] 2001년 2월 28일 DTV 방송방식 재검토 촉구 결의대회

MBC에 세부 실시 계획서와 예산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리고 5월 3일, 방송위원회는 KOBETA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KBS, ETRI, 시민대책위원회에게 DTV 비교 현장 실험 추진협의회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전송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중지부를 찍기 위해 실질적인 테스트가 이뤄지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5월 11일 정보통신부가 추진협의회에 불참한다는 통보를 내리자 정국은 다시 얼어붙었다. 간신히 구성된 협의회가 반쪽짜리 협의회로 좌초하는 순간이었다. 여기에 미국식 전송방식을 선택한 대만 교통부가 방송방식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며 유럽식 DTV 전송방식을 선택하자 KOBETA를 중심으로 7월 20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DTV 비교시험 방해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정보통신부의 황당한 방해공작에 방송기술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어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비교시험 촉구 1인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으며 8월 9일에는 2차 정보통신부 규탄 결의대회가 대대적으로 열리기도 했다.



[사진 6] 2002년 3월 25일 1인 시위 [최민희 현 민주당 의원]

그러자 결국,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DTV 비교시험 추진협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비교시험을 실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보통신부가 원했던 그대로였다. 12월 12일, 정보통신부는 비교 시험 결과 불안정 및 변경방식 불가를 발표했다.

2002년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1월 22일 DTV 전송방식 정치권 관심 촉구 집회를 시작으로 2월 15일, 2월 18일, 3월 13일 연이어 관련 토론회가 열렸으며 3월 19일에는 DTV 전송방식 변경을 위한 소비자 운동이 발족되기도 했다. 동시에 3월 25일부터 DTV 방송방식 변경 촉구를 위한 정보통신부 앞 1인 시위도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이 과정에서 3월 27일과 4월 11일 정보통신부 장관 면담이 불발되는가 하면, 4월 16일과 4월 23일 각각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문광위원장 면담이 성사되기도 했다.

또 4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면담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였다. 그러자 5월 28일에는 DTV 불매 가두홍보 및 방식변경 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됐으며, 6월 11일에는 정보통신부 규탄 및 방식변경 촉구 결의대회가 대대적으로 열렸다.

8월 21일에는 DTV 미국식 결정 백지화 촉구 사회 각계인사 150인 선언이 이뤄졌으며 8월 28일에는 1인 시위 100일을 맞아 DTV 전송방식 조속 변경 강력촉구 결의대회가 연달아 열렸다. 이어 9월 3일에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대통령 후보에게 7대 국민 요구안 및 공개 요구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11월 15일, 전송방식 변경 대선 공약화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며 DTV 전송방식을 둘러싼 투쟁은 더욱 불을 뿜기 시작했다. 여기에 11월 28일 MBC PD수첩이 '디지털 TV, 소비자는 봉인'을 통해 정보통신부의 정책을 비판하자 당사자인 정보통신부가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의 치열한 공방전. 그러나 아직 본게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2000년대 부터 시작되는 DTV 전송방식 투쟁은 2014년 700MHz 대역 주파수 투쟁과 묘하게 닮아있다. 정부의 불통과 아집으로 인한 중장기 방송기술정책의 철학부재는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형이다.(2부에 계속)

최진홍 rgdsz@kobeta.com



[사진 7] DTV 전송방식 대선공약화 촉구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00MHz 대역 주파수와 업계의 비전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방송과 통신의 헝거루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의 복심은 모바일 공개로 플랜 2.0과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에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당위성을 떠나 산업적인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업계의 비전 상실이다.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인 비용을 기반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지적인 관점에서 해당 주파수의 미할당을 통한 국제적,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여기에 충돌 '스팟'이 있다.

대한민국의 주파수 정책은 장기적인 플랜을 전제로 운용된 역사가 없다. 주파수 배분에 따른 파편화는 일상적이고 의식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과 배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당장 논의를 주파수 정책으로 집중해보자.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둘러싼 논의에서 산업의 이윤을 따를 것이냐, 공익의 이윤을 따를 것이냐는 전적으로 가치판단의 문제다. 그러나 여기

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정부 정책의 정지, 혹은 중단이 순수하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어떻게 감안할 것이냐는 것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이 조속히 행해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당장 장비만으로 판단해도 그렇다. 방송과 통신 모두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이 최소 2014년 2월부터 시작될 것이라는(논의가 시작한다는) 이야기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그에 맞는 시스템 설정을 통해 상용화의 바탕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결정이 방송-통신 모든 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사실 기회비용에 따른 사회 안전망의 확보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방대한 빅데이터를 운용하는 정책적 실패는 그동안 많은 데이터베이스 정책의 실패로 사회적인 상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주파수는? 공공의 자원인 주파수의 이용처를 결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이를 명문화 한 헌법적 가치에

서 논의한다면 정부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강도 높게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 정책에 대한 막대한 정책적 지연, 혹은 중단은 현실적으로 산업계와 일반 국민이 동등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용도를 결정한다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통신 활용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대답은 다를 것이다. 특히 콘텐츠의 가공 및 이용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동시다발적인 자원의 확대를 더욱 극대화 시킨다면? 주파수를 자원의 개념과 거시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로 설명한다고 해도 대답은 같을 것이다. 답은 방송의 활용이다. 여기에 공익적 가치를 재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물론 공익적인 가치를 억지로 대입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공익은 물론, 경제적인 파급효과까지 담보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정부는 주파수 정책의 불통 및 무능을 통해 소위 눈치만 보고 있다. 이는 창조경제의 기본에서 한참 벗어난 어

천 우 일 서암미래연구소 경제IT선임연구원

선평 행동이다. 방송과 통신의 활용도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 아닐까 한다.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스스로 포기하고, 순수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정부의 결단에 미래의 비전이 있을 리 없다. 아울러, 지상파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상파의 주파수 할당에 불편함을 느끼는 일반 국민을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민첩성을 동시에 겸비해야 할 것이다.

주파수 할당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은 더욱 요원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는 경제적 파급은 타이밍을 놓칠것이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색을 완전히 탈색하고 공동 연구반의 결정에 공정하고 담백한 판단의 후폭풍을 보존해야 한다. 주파수도 자원이다. 국민의 세금과 같은 것이며, 빠르게 활용처를 찾아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다양한 지상파의 미래를 타진하라

전 태 수 전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국정과제인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방송산업육성)」 및 「창조경제 실현계획(6.5)」의 후속조치로써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관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종합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 방송은 창조산업의 핵심분야이자, 창조산업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에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일련의 가치사슬이 복합된 산업으로, 해외 국가들도 창조산업으로 분류하고 적극 육성하는 분위기라는 것이 핵심이다. 즉 타당한 당위성을 가지는 정부의 거대한 선언이자 기조라는 뜻이다.

실제로 종합계획은 다양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화두를 던진다. 현재의 방송이 과도한 시장점유율 규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해외 국가에 비해 높은 규제를 두고 있어 글로벌 경쟁에 불리하며 매체별 간막이식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 형평성 문제 유발, 방송기술간 결합서비스 도입이 불가능한 법령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그것이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 광고수의 정체(최근 10년 2% 성장)와 저가구조의 유료방송 가입자 포화(2013년 6월 2,635만 가입가구, 주민등록세대 대비 129%)는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스마트 미디어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법제도 미비와 진흥전략 부재

등으로 갈등 확대 및 산업화 역시 지연된다는 점도 빠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종합계획은 대부분 방송 사업자의 사업 전략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 편중되어 있어 글로벌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시장 협업 또는 직접 진입 확대 중이나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종합계획은 방송산업 발전으로 방송통신융합 및 ICT산업과 문화산업·관광·제조·유통업까지 가치사슬이 연계 발전하는 창조적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규제완화 및 방송 콘텐츠 생태계 개선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발전을 적극 수용하여 방송통신융합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종합계획은 공격적인 미디어를 버릴 생각이다.

물론 종합계획은 산업간 이해관계 보다 국민편익을 방송 정책의 우선 가치로 작용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알려진 내용은 180도 다르다.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말살하고 유료방송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방송의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겠지만, 이것이 방송의 공공성과 연계될 지점은 매우 흐릿하다. 당장 지상파 방송이 가장 큰 피해자인 셈이다.

하지만 더 커다란 문제는 따로 있다. 지상파는 각 방송사의 숙원사업에 열중할 나머지 대응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지상파 방송사

가 가지는 역사성과 속성을 스스로가 인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려는 것 같다. 물론 다양한 목소리가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은 목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개진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 스스로가 추진하고 설계한 보편적인 플랫폼적 속성을 빠른 시일안에 등장시켜야 한다. 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본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당하는 일차원적 전술보다는 그 이상을 뛰어 넘는 새로운 대안제시가 절실하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필자는 다수의 원고와 논문을 통해 지상파의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었다. 공익적 미디어 붕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왜 지상파 방송이 나서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지상파는 각자의 오래된 숙원을 부여잡고 자신들의 미래는, 아니, 지상파에 속한 임원들의 미래는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수신료 현실화(편집자의 요청으로 용어 변경)와 UHD-TV, 이에 따른 주파수 정책의 가능성은 지상파의 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 어두기만 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은 전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UHD-TV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유료방송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막강한 화력을 뽐내면서도 불구하

고, 8VSB를 통한 다채널 서비스의 무력화를 예상하고도 방대한 선택지 앞에서 깊은 고민에만 빠져있는것 같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종합계획의 커다란 줄기를, 그 실체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는 지상파 방송사가 답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지상파 방송사는 다양한 가능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라. 세계는 넷플릭스의 성공에 힘입어 더욱 다양한 뉴미디어의 격전지로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간 미디어 플랫폼의 자리까지 위협받는 지상파의 종착지는 뻔할 뿐이다. 당장 행동에 나서라. 플랫폼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본부터 비전까지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주문하라.

지상파 방송의 미래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결정한다. 이러한 조화로운 결합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다만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상파 방송사를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만 전담하는 PP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시장 지배자적 위치에서 시장 약탈자적 위치로 부당하게 진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보편적 플랫폼의 말살은 그 자체로 국가 공공 인프라의 사영화일뿐이다.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 R O A D C A S T I N G & T E C H N O L O G 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장비, 음향기기전) 전시회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KOBASHOW 2014



24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4.05.20-23
COEX, SEOULwww.kobashow.com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이앤엑스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참가 신청 및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